

“지역구 의석 조정시 호남 6~7석 사라져”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김재원 분석...광주 2·전남 2·전북 3석 조정 불가피 한국당 총력 저지 방침...여야 내부서도 반대 '처리 험로'

선거법 패스트트랙 급물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핵심은 현재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47석인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75석인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득표율의 50%를 반영해 배정한다.

한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으면 일단 300석의 10%인 30석의 절반인 15석을 우선 배정한다. 지역구에서 5석밖에 얻지 못했다면 10석은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내년 총선을 지를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만큼 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한국당은 17일 민주당과 야 3당이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패스트트랙 처리를 '날치기', '끼워팔기'로 규정

하고 총력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념 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일부 야당을 현혹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정권 비판 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판 '계수타포'라고 비판했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 "그러한 각오로 하겠다는 뜻이고,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압박 수단"이라고 답했다.

◇여야4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한국당 제외한 4당 내에서도 선거제 개편안 또는 패스트트랙 자체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바른정당 출신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개혁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14명의 호남지역구 의원이 있는 민주평화당 내에서는 호남지역구가 줄어든다면 지역

구를 28석이나 줄이는 선거제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다.

◇호남 지역구 영향은=여야 4당에서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면 호남에서 6~7석의 지역구가 사라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온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월 현재 지자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토대로, 225석으로 지역구를 조정할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10석이 감소하고, 충청권 4석, 강원 1석, 호남 6석, 영남 7석이 감소한다고 지난 15일 분석했다. 시도별 인구를 225석 기준 지역구 평균인구인 23만339명으로 나눈 지역구 숫자를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로 산정한 결과다.

김 의원은 "225석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30만7041명, 하한선을 15만3405명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엔 전국적으로 12석만 감소하지만, 각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에 맞춰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을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225석이 될 때까지 재산정했

다"면서 분석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동·남구를, 서구·이, 전에서는 여주시갑과 을이 각각 인구하한에 미달한 상황여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광주 동·남구·을을 인공 지역과 합쳐 동·남·구로, 광주 서구·을과 갑을 합쳐 서구로, 여수갑과 을을 합쳐 여수시, 해남·완도·진도군을 해체해 인공 지역으로 분산 편입해 1석을 줄이는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전북의 선거구도 전면 재조정해 기존 10석에서 8석으로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지난 14일 공개서한을 통해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면, 인구수 부족으로 조정할 지역구는 총 26석"이라며 "서울은 49석 중 2석(4.1%), 경기도는 60석 중 6석(10%)만 조정하면 되는 데 비해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는 8석 중 2석(25%), 동남구·서구·을, 전남은 10석 중 2석(20%), 여수시갑과 을, 전북은 10석 중 3석(30%)을 조정해야 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다음주 인사청문회 주간

7개 부처 25~27일...한국당, 막말 등 송곳 검증 예고

국회는 오는 25~27일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정밀 검증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특히 일부 후보자의 막말 논란, 품수 증여 의혹,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이 제기된 데다, 여야 간 정국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 등을 입증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안정적인 출범을 뒷받침 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일부 후보자의 낙마를 버리고 있다.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가 소셜네트

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통 쓴다" "군복 입고 쇼나 한다" 등 온갖 논란성 발언을 쏟아내 한국당으로부터 집중 비판을 받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낙점된 최정호 후보자는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품수 증여'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후 월세 계약을 맺고 해당 집에 계속 살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특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등 다양한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직장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둘째·셋째 딸이 각각 1억8000만원과 2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점, 박 후보자의 CJ E&M 사외이사 경력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이석형 전 함평군수 복당 보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복당이 신청된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에 대해 최근 복당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내년 총선에서 광산갑 출마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전남도당을 통해 복당이 신청된 이 회장과 배중호 세한대 교수 등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결정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만큼 복당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복당 및 입당에 대한 중앙당의 명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아서 판단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당 전 력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

한 공격 등 종합적인 부분을 감안해 입

복당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의 복당 움직임에 해당 지역구인 이용빈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장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광산갑 지역위원회는 최근 중앙당에 '이석형 복당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용빈 위원장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석형 전 군수의 복당 신청은 지난번 총선·대선에서 경쟁한 안철수 및 국민의당에 대한 거부감과 자신의 반복된 탈당으로 함평에서의 민심이반이 심해지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광산구를 지역구로 선택하려는 노획한 정치인의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권역별 비례대표 서울 14·인천경기 23·부울경 12·호남 9

연동형+권역별 비례제 혼합 개정안 적용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했다.

여야 4당의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서울 14석, 인천·경

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 9석 등으로 배정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지역별 의석수

감소 현황 자료는 '가짜뉴스'라며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수도권은 10석, 충청권 4석, 강원 1석, 호남 6석, 영남 7석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의원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을 합하면 결국 서울 7석, 인천·경기 20석, 충청 5

석, 대구·경북 5석, 호남 3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인구 비례로 배분했을 때의 가계산"이라며 "구체적인 산식은 법 조항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몇번까지 당선시키는지 등 세부 룰에 대해서는 "법조항을 명문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려할 점이 많다"며 "최종 결론은 여야 합의 후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평화당, 광주 4개 지역위원장 재선임

민주평화당 광주지역 4개 지역위원회가 최근 개편대회를 열고 현 위원장을 재선임했다.

17일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동남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개편대회에서 장병완 현 지역위원장을 재선임했으며, 북구를 지역위원회도 최경환 지역위원장을 다시 뽑았다. 앞서 서

구를 지역위원회는 천정배 현 지역위원장을, 광주 서구갑 지역위원회는 김명진 현 위원장을 재선임했다.

재선임된 이들 지역위원장은 다음 전당대회까지 지역 내 당 조직을 관리하고 당과 지역 주민 간 교류협력을 수행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질판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독창적인 백내장 수술

젯토(ZEPTO) 노안·백내장

정확 신속 안전

-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 위해 수정체 전낭 절개 필요
- 기존엔 칼을 사용해 수기로 하던 전낭절개를 젯토 장비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거
- 미세전류를 이용해 360도 원형의 완벽한 수정체 전낭 절개 가능
- 형상기억합금으로 주변 세포에 열 손상을 최소화하고전낭 절개면 인장 강도 높여 안전
- 수기로 제거시 시간이 걸릴수도 있지만 젯토 사용시 수술 시간 현격히 단축
- 동공이 작거나, 백내장 진행이 심하고, 각막이 혼탁해도 쉽게 수술 가능
- 완벽한 전낭 절개로 더욱 안전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